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2002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99만원

-금년 96만원 대비 3.5% 인상-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2002년도 최저생계비'와 '2002년도 현금급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소득기준) 및 급여기준이 된다.

- 2002년도의 4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99만원이며,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 34만 5천원, 2인가구 57만 2천원 등임.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보다 3.5%를 인상시킨 것임.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고금액기준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과 해당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매월 지원받게 됨.
  -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가 내년도에 받게 되는 현금급여액(생계비 및 주거비)은 금년보다 3.5% 인상된 87만 1천원임.

## 2002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금년수준으로 동결

- 2001년 11월 3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2002년 수가계약을 위한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함. 다만, 다음의 사항들에 한하여 최소 범위내에서 조정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 가·나·다 군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하함으로써 환자 부담 감소 및 병원행정 간소화
  -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 자연분만료 조정

##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DB)' 를 본격 가동

내달부터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획 및 결정과정에 대한 과학적 결정을 지원하는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DB)' 를 본격 가동시킨다. 복지정책DB는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행정자료를 집적·관리하게 된다.

- 그간 관련 행정자료는 수년간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유용한 정보 손실, 정보 유통 단절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따라서 국회의원 등의 요구자료 작성시 과거에 작성했던 것과 조건이 달라지면 매번 조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일선 공무원들의 자료작성 및 보고의 어려움이 컸음.
- 복지정책DB는 지난해 시·군·구(234개)별로 전산화한 시스템(복지행정시스템)을 모두 연계하여 별도 조사 없이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처리 결과 발생한 정보를 자동 추출, 전국자료를 생성함.
  - 이는 향후 기초생활보장관련과 모·부자가정관련(시설보호 제외) 자료의 95% 이상의 문서보고 부담을 경감시키리라 예상됨.
  - 다만, 현재 일선 복지행정 전산화에서 제외되어 있는 업무 현황은 기존의 방식대로 보고 받되 해당 부서별로 조사표 표준화 및 배포·취합 과정을 on-line화하여 한번 조사된 내용은 복지정책DB를 통해 공유, 타업무와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함.

- 복지정책DB는 향후 다양한 시계열 복지정보의 추출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의 지역간 이 중수급자 추출, 모의정책 집행결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기보고의 배제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리라 예상됨.

##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정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정 등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입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보험료 변동폭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요소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여 약 400만 세대, 평균 2,300원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신 자동차 보유세대 약 337만 세대의 자동차 관련요소의 보험료를 약 2,700원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계획임.
- 중·소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진료수입 감소 및 의료인력의 이직률 증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본인 부담을 조정할 계획임.
- 또한, 한시적 경감 해제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1년 12월분 보험료 대비 2002년 1월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인상분의 50%를 2002년 한 해 동안 경감할 계획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일수의 상한을 365일로 하고, 1종 수급자 입원시 식대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

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급여일수)는 연간 365일로 하되, 정신질환·폐결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은 30일을 추가함. 이 경우에도 급여일수를 연장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 2).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어 입원시 별도로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급여이므로 1종 수급권자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별표 1).

## 지난해 건강보험 암환자 10만명 새로 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지난해 건강보험대상자(4600만명) 중 암환자 치료에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5410억원으로 확인됨.
- 공단은 건강보험에서 암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218,735명이며, 이 가운데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만 157,440명이라고 밝힘. 입원환자 가운데서도 지난해 새롭게 입원한 환자는 101,781명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56,515명(55.5%)으로 여자 45,266명(44.5%)보다 약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암 유형별로는 위암 18,741명(18.4%), 폐암 14,363명(14.1%), 간암 12,382명(12.2%), 대장암 10,118명(9.9%), 유방암 5,830명(5.7%), 자궁경부암 4,018명(3.9%) 순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6대암으로 알려진 이들 암으로 모두 65,452명(64.3%)이 입원하여 암환자 3명중 2명 꼴로 입원한 셈임.

## 금연 종합대책 확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청사와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등의 건물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청소년에

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을 실시하고, 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사업과 금연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번 금연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남자 성인과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이 각각 세계 1위와 2위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최근에는 중학생과 여성의 흡연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금연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우선, 청소년의 금연기회를 차단하도록 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보호하며 현재 67.8%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 이하로 낮추며, 여성의 흡연율은 5% 이내로 낮출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금연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청사내 흡연금지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중에 국민건강증진법령을 개정하며,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금연교육 확대, 폐암 등에 대한 검진 확대 등은 사업별 추진방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또한 매 반기별로 금연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법정부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